

코로나19 탓에 쌓여가는 재활용 쓰레기



1일 재활용품 선별장인 광주시 서구 세하동 희망자원에서 작업자들이 분류된 스티로폼을 분쇄기에 넣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1일 광주시 북구 월출동 한 재활용쓰레기 선별업체에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재활용쓰레기 100여 더미가 쌓여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1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소태동 재활용쓰레기 선별장. 15명의 직원들이 산을 이룬 재활용 쓰레기 앞에서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날 새벽 6시 30분에 선별장에 출근, 5시간 가까이 선별작업에만 매달렸지만 도무지 줄어들지 않는 재활용 쓰레기에 허를 내들었다.

김모(48)씨는 최근 광주시 서구 풍양동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텀블러를 내고 커피를 주문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컵으로만 제공한다고 거절당했다. 김씨는 가지고갔던 텀블러가 아닌,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를 들고 나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일회용 쓰레기가 폭등하고 있다. 그나마 중국 등 해외로 수출하는 방안도 막히면서 광주시 자치구마다 쌓이는 일회용품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업체들은 판매 단가 하락에다, 급증하는 일회용품 처리로 인한 인력난 등을 하소연하고 있다.

사용량 급증에 광주 선별장마다 산처럼 '수북'...처리 골머리 처리업체 "비용 증가로 힘든데 수출 등 판로까지 막혀 막막"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5개 자치구가 직영·위탁 운영하는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오는 재활용 쓰레기는 올 들어 2월 말까지 4692t으로, 1년 전(3927t)보다 20% 가량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2월 일회용품 등 재활용 쓰레기량은 2212 t으로, 전년도 1797 t보다 23% 증가했다.

아파트별로 계약한 민간업체들을 통해 수거되는 재활용 쓰레기량까지 포함하면 30%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자치단체측 설명이다.

재활용 쓰레기 급증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한몫을 했다는 게 업체측 분석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종에 대해 관

할 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토록 했었다.

광주시도 이같은 점을 반영, 5개 자치구 내 식당·카페 등 2만2000여곳에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일시 허용토록 조치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에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외식 대신,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지역민들이 늘어나면서 일회용품 등 재활용쓰레기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선별업체들은 봄철은 대부분 재활용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시기인데도, 지금 여름 성수기 만큼 물량이 증가해 일손이 모자라 전업에 토요일 비상근무까지 해야할 형편이다.

재활용 쓰레기가 많아졌지만 수익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재활용쓰레기 증가로 처리비용과 인건

비는 증가하는 반면, 중국 등으로 보내야 할 쓰레기 판로가 코로나19 때문에 막히면서 오히려 경영난을 격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쓰레기량이 늘면서 국내 재활용쓰레기 단가도 기존에 견줘 절반수준(폐트병단가 82원-45원, 고철180원-60-100원)으로 떨어졌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폐기물 처리비용이 늘었는데 코로나19까지 겹쳐 힘들어 죽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민간 재활용쓰레기 처리업체 대표는 "평소같은 하루 40t의 물량을 처리하던 데서 최근에는 50t 이상을 처리하느라 쉴 틈이 없다"면서 "날마다 물량이 쏟아지고 업무량은 늘면서 처리비용은 증가하는데 팔 곳이 없어 빈 부지에 쌓여만 놓고 실정"이라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민간업체는 수익사업이라는 이유로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조금 지원 등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클럽 붕괴 사고' 수사 마무리 춤 허용 특혜조례 의혹 결국 못밝혀

수사 미흡 속 4명 추가 기소

지난해 무려 36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지역 클럽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 마무리됐다.

업주는 불법 증축을 했고 점검업체는 건물 점검을 건너뛰었고 자치단체는 점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듯, 손님들을 상대로 허가받지 않은 클럽 영업을 하면서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는 게 경찰 수사결과다. 우리사회의 무신경한 안전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례 제정 의혹 끝내 못밝혀...2% 부족=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게 가능한 조례 제정을 위해 부정하게 관여하려 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등으로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유흥주점이 아니라도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게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되면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청탁을 시도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는 지난 2016년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조례는 150㎡ 이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했지만 '조례 시행 전 영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부칙을 달아 해당 클럽도 춤을 추면서 운영을 하는 형태가 가능해졌다. 기존에 부과됐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면제됐다. 사고 이후 해당 클럽에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변호사시험 내년부터 한글 법전 제공

내년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한글로만 쓰인 참고용 법전을 제공받아 시험을 치르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국·한문이 섞인 법령문을 한글로 변환해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시험장에서 제공한 시험용 법

경찰은 그러나 관련 공무원과 연결하기 위해 제3자에게 로비를 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실제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경찰 수사가 미흡했던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부실한 건축 행정...안전불감증 드러내=경찰은 지난해 9월 서구 치평동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업주 A(44)씨 등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 중 클럽 업주 등 8명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겼다.

우선, 건물 업주는 기존 업주들이 1차로 불법 증축을 한 데다, 2차로 증축을 단행했다. 물론, 허가 절차는 없었다. 허부기 등 없이 상판을 설치하고 하중을 견디기 힘든 얇은 두께의 자재를 불안전하게 용접하는 수준임에도 점검은 허술했다.

건물 점검업체 등은 클럽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도 점검을 한 것처럼 가져 보고서를 만들어 자치단체에 냈다.

자치단체는 이 보고서의 허위 여부를 밝혀내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경찰과 자치단체는 지난 2018년 '버닝썬' 사태 이후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으면서도, 해당 클럽의 불법 증축 등의 행위를 밝혀내지 못했다.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들 담당기관의 부실한 안전의식이 맞물리면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치러지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내부 시설이 붕괴돼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김민석 기자 mskim@

음식물 묻고 분리수거 안돼... "말만 재활용품이지, 쓰레기나 다름 없어"

재활용품 선별장의 한숨

30~40%만 재활용 가능

시민의식 개선 절실

"말은 재활용품인데, 쓰레기나 다름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분류 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일회용품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리수거 주체인 시민들의 의식이 절

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민간수거업체와 직접 계약해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한다.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직영 또는 위탁의 방식으로 선별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비교적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지만 주택가나 원룸촌·상가 등의 재활용쓰레기들은 뒤섞이거나 음식물들이 묻어 있는 등 분리수거 자체가 힘든 실정이다.

결과 재활용쓰레기 중 30~40%만 재활

용 가능하다는 것이 업체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동구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12년 동안 일하고 있는 양동훈씨는 "오염물이 묻어 있으면 재사용료를 만드는 업체로부터 거부를 당한다"며 "오염된 재활용 용기는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산구 민간업체 대표도 "재질이 다른 재활용쓰레기가 섞여 있는 게 상당수"라며 "음식물이 담긴 재활용기에는 나무젓

가락이 들어있기 일쑤고, 각종 일반 쓰레기까지 섞여있는 것이 대다수"고 한숨을 내쉬었다.

재활용쓰레기 업체 관계자들은 "제대로 된 분리수거 교육과 제대로 된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식의 정착이 필요하다"면서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은 행구고, 라벨 등 다른 재질을 제거하고, 버릴 때 분리배출 한다면 재활용률은 상당히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음주 무면허 운전자 바꾸려다 징역 1년...항소했지만 "이유없다"



○·술을 먹고 70m를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다른 사람 이름을 적어내기까지 했던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유없다"며 기각.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지난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 항소심에서 음주운전(벌금형)에다 무면허운전으로

전의 경우 관보에 공고된 법령 원문대로 수록돼 있었다.

법무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법제처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와 시각장애 응시자들을 위한 음성변환용 법전 등을 토대로 한글 법전을 제작해 제공하기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